

‘오월·부마항쟁 정신’ 헌법전문수룩 개헌 요구 들불 확산

오월·부마단체, 국회 앞서 결의대회
“개헌은 책무...여야 결단해야” 촉구
역사 왜곡 차단 헌법적 가치 명문화
羨시장 “남은 것은 국힘 당론 철회”
혁신 시장 “국힘 표결 참여 응답을”
地選 동시투표 위한 시한 내달 10일



“이번엔 꼭”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가 주최한 5·18 정신 및 부마항쟁 헌법전문 수룩 촉구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석발하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단체 대표자들을 바라 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를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룩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위한 국회의 신속한 개헌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룩범시민추진위원회와 5·18정신헌법전문수룩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부마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룩 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개헌안 의결과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표결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수록하는 것은 국가 폭력과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역사를 계승하는 일이자, 국가 차원에서 역사 왜곡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없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을 재고하고 소속 의원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 표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사회 회장은 “부마와 오월을 헌법에, 민주헌정을 완성하자”며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자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정광민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부마와 5·18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은 단순한 문구 추가가 아니라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현 시민개헌넷 사무처장은 “다가오는 국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여야는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과 회피로 국민의 회생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은 “헌법 전문 수록이 실현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억을 넘어 헌법으로, 회생을 넘어 국가의 책임으로 나아가는 길에 모든 시민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도 참석해 개헌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연대사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조선을 구했듯 이제 12명의 의로운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새겨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국민의힘 당론 철회”라며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는 폭거인 만큼 당론을 즉각 철회하고 자유투표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번은진 기자

‘광주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6·3 지방선거 D-35

시민사회, 선거법 집행정지 가처분도

“민주당, 표의 등가성 보장 약속 거절”

광주 시민사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 소원 및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기사 2·3면

대응팀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광주·전남 시·도민의 자부심을 짓밟았다”며 “자신들의 작은 이익 실현을 위해 광주에서만 광역의회 위원 선거구를 6개나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응팀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해 왔지만 개정 결과는 이 약속이 거짓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응팀은 헌법재판소에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응팀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광역시·도의회 무투표 당선이 50%가 넘는 점을 들어 “광주·전남의 정치 효용감은 이미 바다 끝까지 내

려갔다”며 “행정통합을 소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갈등으로 뒤덮을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응팀은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이 위험적인 상황을 바로잡아 달라”며 “표의 대표성이 실현돼 시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선거법 개정이 진행될 수 있게 빠른 판결로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형우 기자

Today	
5·18 스마트투어 앱 AR ‘유명무실’	6면
전남농민 65세 이상 절반↑ ‘농업위기’	12면
‘버티는 힘 강해야 이기는 힘도 생긴다’	16면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2년4개월 늘어

통일교 금품 수수 전부 유죄

도이치 추가조작 일부 인정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관련기사 4면
서울고법 형사5-2부(선종오 성연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중 1심 형량인 징역 1년8개월보다는 무겁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한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

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11월 블랙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범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사별 가방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이른바 ‘목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승용차 5부제에 동참해주세요!

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실전을 위한 국민행동



출퇴근시 카풀 활성화하기



유연근무 활성화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